
 <h1 style="margin: 0;">보도자료</h1> <p style="margin: 0;">2021. 2. 9.(화) 배포</p>		 <p style="margin: 0;">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</p>
보도일	2021. 2. 9.(화) 14: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·방송·통신 2. 9.(화) 14:00 이후 보도 가능	
담 당	교육부	사회정책총괄담당관 과장 강정자 사무관 윤여진 (☎ 044-203-7256)
		지역혁신대학지원과 과장 이지현 사무관 한성태 (☎ 044-203-6923) 사무관 이유림 (☎ 044-203-6924)
		대학학사제도과 과장 안웅환 사무관 정예영 (☎ 044-203-6288)
		교육시설과 과장 정영린 사무관 정홍규 (☎ 044-203-6298)
	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팀장 강호원 사무관 김하연 (☎ 044-202-4852)	

제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

- ◆ 대학의 '학생 마음건강 안전망'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원
- ◆ 연구실 설치운영·유지관리 기준 정비 및 사고 보상 강화를 통한 대학의 안전한 연구환경 구현
- ◆ '지방대학의 혁신을 통한 지역혁신'을 위한 「2021 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」 발표

□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2월 9일(화),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.

「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방안」

-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이 제한되고 비대면 수업이 지속되면서 심리·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**맞춤형으로 지원**하고자, **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체계적 안전망**을 구축한다.
 - 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해 상반기 중 **전환기 학생**(신입생·2학년)을 대상으로 **정신건강 진단 검사**를 실시하고, 선별된 학생은 **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**와 협력하여 **맞춤형으로 관리**한다.

- 보다 **전문적인 지원**이 필요한 경우, 국립대병원의 '**거점 대학생 대상 상담 클리닉**'을 통해 심층진단 및 상담, 심리치료를 제공한다.
 - 치료 후에는 **학교에 복귀하여 적용**할 수 있도록, 대학 - 정신건강 복지센터 - 지역 병원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**정기검진 시기 안내·상담치료** 등을 **지속적으로 지원**한다.
- 대학이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**중추적 역할**을 할 수 있도록 **행·재정적 지원**을 강화하고, 다양한 학생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안내하여 **우수 사례가 대학 간 공유·확산**되도록 촉진한다.
- 대학들이 (전문)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**상담 인력 인건비**, 학생 정신건강 진단·멘토링 등 **프로그램 운영비**에 **우선 배정**하도록 **유도**하여, 학내 심리방역 활동을 활성화한다.
 - **재학생 1,000명 당 1명 수준**의 **상담인력**을 확보하여 학내 상담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, 전일제 전문 상담 인력을 증원하여 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한다.
 - 아울러, 우수 학생상담센터 운영 사례 및 연계 가능한 지역 **전문 기관 소개** 등을 위한 지침(가이드라인)을 마련하여 대학에 안내하고, 교육부 자문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다.

「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종합대책」

- 먼저, 2023년 「**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**」 시행*에 대비하여 세부이행지침을 개발하고, 필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**과태료**를 부과하는 등 **이행 강제력 확보**를 위한 추가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.

*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개정(2020년 6월) 관련

- 예체능 분야 등 비이공계 연구실의 안전관리는 「교육시설법」상 '교육시설의 안전·유지관리 기준'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.

< 연구실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강화 방안 >

구분	현재 법적근거	강화 방안
이공계 연구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연구실 안전법 ■ 교육시설법, 재난안전관리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연구실 설치운영기준 제정 (2020년 12월) ※ 이공계 연구실 대상 2023년 이후 시행 ■ 연구실 관련 안전·유지관리 기준 마련 (~2021년 6월)
비이공계 연구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교육시설법, 재난안전관리법 (건물 등 시설관리 중심) 	

- 연구활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「산업재해 보상보험법」 개정*을 적극 지원하고,

* 발의 현황(3건) : 전해숙(2020.10.6.)·임이자(2020.11.18.)·강은미(2020.11.27.) 의원

-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의 경우,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상 치료비 보상한도를 상향하고, 보장 기간 및 범위를 확대해서 보상을 강화한다.

- '연구실 안전공제 보험'을 개발해서 비이공계 연구실까지 가입을 확대하고 비이공계 연구실의 안전관리·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(가칭)안전지원센터(한국교육시설안전원 내)를 설치하는 한편, 이공계 연구실을 위한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의 기능을 강화한다.

- 연구실 안전관리책임자(교수)와 연구활동 종사자의 교육 이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학별 학칙*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, 국가 연구개발(R&D) 과제 신청·평가와 연계**하는 방안도 검토한다.

* 실험·실습실 출입 및 교과목 편성 제한, 실습 기자재 구매 후순위 배정 등

** 과제 참여 시 연구실 위험분석결과 의무 제출 및 중대결함 미개선 대학 참여제한 검토, 연구 지원체계 평가지표에 교육 이수율 반영 등

- 수요자 맞춤형 교재·학습자료를 개발하고, 체험관 운영 및 우수 연구실 인증제 등 참여형·공감형 안전행사를 통해 관련 정책 안내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도 노력한다.

- 교육부 - 과기정통부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이번 대책에 따른 합동 검사 및 정보공유 등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한 협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.

「2021년 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」

- 「2021년 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」은 대학·지자체의 협업체계로서 구축된 '지역혁신 플랫폼'이 사업 1년차에 구축한 기반을 토대로, 본격적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의 취·창업과 정주까지 지원하도록 추진한다.

- 올해는 복수형 플랫폼 1곳을 신규 선정하고 기존 단일형 플랫폼이 다른 지자체와 연합하여 복수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한다.

※ 2020년 선정된 경남, 충북, 광주·전남 플랫폼 계속 지원

- 이와 같이 복수형 플랫폼을 우선 확대하여 광역자치단체 연계·협업을 통한 동반상승(시너지)효과를 창출하고, 성공적으로 협력기반을 구축한 단일형 플랫폼의 성과를 다른 지자체로 확산하고자 한다.

- 또한, 지역혁신 플랫폼이 제안한 사업 개선·연계방안은 지방대 육성지원위원회 및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여 조정하는 등, 향후 플랫폼이 지역인재양성정책의 총괄기구로서 역할을 정립하도록 상향식 관리체계(거버넌스)를 구축할 예정이다.

□ 한편, 개정된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(6월 1일 시행)에 따라, 하반기에는 플랫폼 구축 지역 중 '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'을 지정하여, 플랫폼 혁신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.

□ 사업 신청 예비 접수는 3월 9일(화), 사업계획서 접수는 4월 16일(금) 마감되며, 최종 평가결과는 5월 중 확정하여 발표될 예정이다.

※ 교육부,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(2월 9일)

